

김영록 지사 “2028년 G20 정상회의 전남 유치 준비”

대통령 지방도시 추진 언급…국제행사 개최 잠재력 갖춰
‘2026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 등 원대한 꿈 실현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전남 유치를 준비하고, 2026년 전남 과학 기술 진흥 원년을 만드는 등 웅대한 꿈 실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 목표를 원대하게 품어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달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확정됐고, 대통령께서 지방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AI 에너지 수도 전남’, ‘기후변화 전남’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만큼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자”고 말했다.

특히 “인프라 부족이 문제인데 경주도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유치전에 뛰어들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대규모 과학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에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되고, 고흥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 민간 우주발사산업 본격화와 세계 우주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10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5배였는데 그만큼 기술발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도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이 이뤄지고 있다”며 “2GW 규모로 단지화·대형화하면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광양시 산업위 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책 보강·강화 대책 마련, 국내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여수~고흥 백리길, 대형화하면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되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다목적체육관이 전남 체육에 좋은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 등을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이달 공모 대비 지·산·학·연 협의체와 제안서 작성 돌입
22일 국회서 토론회…“전남 동부권 미래 신산업 중심지”

전남도는 정부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발맞춰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호남,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이 중 호남권을 ‘핵심광물(원료)·양극재’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12월 중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K-배터리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료(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직결되며, 광양만권을 ‘원료소재니켈·리튬·초소소재구체·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과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 초안 작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및 TF를 구성·운영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유관기관·기업 간 공모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와 TF를 중심으로 공모 대응과 산학연 협력 강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특화단지의 협력 체널 강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또 원료소재 생산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강점을 살려 배터리 제조사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K-배터리 산업이 제조 경쟁을 넘어 공급망 경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광양만권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기업 투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아울러 전남 동부권이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차전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북구청장 도전’…문상필 부대변인, 6일 출판기념회
광주동신고 체육관서 북구지역 성장 새로운 길 비전 제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오는 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문상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굴뚝에서 찾은 미래’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굴뚝에서 찾은 미래’는 시의원 재임시 절과 광주 공동체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의정 경험과 고민과 선택, 그리고 북구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는 지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과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하기위한 탐 흘린



노력의 기록이며, 북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의 실현 전략을 담았다.

문 부대변인은 “이 책은 북구를 지속 가능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난 43년간의 피땀 흘린 노력의 기록이며,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다시 뛰겠다는 선언이다”며 “문상필이 다시 결음을 내딛는 첫 번째 다짐이자, 주민들과 행복 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이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홍기월 의원 “광주교육청 전산망, 재난 대비 부족”
교육부 예산 8배 급증에도 전산센터 ‘블랙아웃’ 위기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관련 예산이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교육청 자체 전산센터는 재난 발생 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사진)은 2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부 세종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 전산센터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약 57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DR센터 분담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터의 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장승기 기자 sky@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시 출근제와 충돌 우려”
이명노 시의원, 대책 촉구

광주시의 대표 돌봄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2026년 전국 시행 예정인 ‘10시 출근제’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 여건 악화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의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의 혼선과 함께 2026년부터 시행될 ‘10시 출근제’가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아이돌봄이 소통의 날’ 행사에서 아이돌봄 자원자들은 “10시 출근제가 시행되면 자원자들의 파견 시간이 줄어들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충족 못하게 되고,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광역센터 또는 제공기관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 보육정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무상보육 확대·돌봄사각 해소·교직원 처우개선 등 호평
교육부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지자체 부분 최고상

광주시가 추진한 무상보육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정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광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 포상’ 지자체 부문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세 아동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면서 대상을 넓혔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해 포

유적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아동돌봄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유아 발달 상담(컨설팅) 사업을 도입해 발달 지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기관 연계를 강화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도 맞춰 기자재비와 공동이용시설개선비 지원을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50%를 달성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요건을 6개월 단축해 2500여명의 교직원

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조리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과 전국 최초로 민간·가정·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통일시켜 인상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을 권역별로 집중 관리하고 비담임교사를 33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과 급식비 지원 단가를 2022년 3100원에서 2024년 3160원, 올해 3260원으로 늘렸다.

강기정 시장은 “충충한 돌봄지원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해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성희 “내란 1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사진)은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시도 1년을 맞아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강성희 부의장은 2일 발표된 입장에서 “12·3 내란 시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책임도 온전히 묻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법외국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에 대한 체계적 수사·재판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외국죄 신설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검



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를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내란의 후과를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사법 정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